

“이제는 실천할 때다”

유통시스템 개선 위한 협업구조 갖춰야

도서유통은 출판계의 '아킬레스건'이다. 각 산업분야는 선진형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출판계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유통관행에 발목이 잡혔다. 출판계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유통의 개선방향을 제시해왔다. 거래의 투명화와 합리화, 대형 유통기구의 설립, 전산화 및 정보화 등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제는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출판유통은 해방 이후 한국 출판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혀왔다. IMF 때의 도매상 연쇄부도는 출판유통의 후진성과 전근대성을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었다. 정부의 긴급자금이 수혈되고 출판계 내부의 자정 움직임도 없지 않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출판계는 또다시 유통대란을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시달리고 있다.

위탁거래 제도가 무제한의 반품 불러

이런 위기의식에는 국내 도매유통의 구조적 문제가 개입돼 있다. 도매유통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영세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출판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출판산업 실태조사》에서 잘 드러난다. 이 조사에 따르면, 1999년도 현재 도매업체 가운데 자기자본금의 규모가 5억원 미만이 84.6%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평균 직원수는 전국도매상이 29.9명, 지역도매상은 5.2명에 불과했다.

도매의 영세성은 매출액과 순이익률에서도 드러난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8년 현재 전국 도매상의 매출액 평균은 약 100억원, 지역도매상은 약 9억 6천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매출액 가운데 순이익률로는 10% 미만이 45.6%로 가장 높았고, 10%~20% 사이가 그 다음인 42.4%였다.

도매상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온 것은 위탁거래 제도다. 위탁거래는 중복거래와 무한정한 반품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유통구조의 부실화를 불러오는 근본요인이다. 현재 도매상

들은 출판사와 거래할 때 담보 위탁거래 비율이 76.9%에 이르고, 소매서점과 거래할 때는 무담보 위탁거래가 82.4%를 차지한다.

어음결제 관행과 높은 반품률은 출판사의 경영을 압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 도매상들은 출판사와 거래할 때 평균 61.5%가 어음결제하고 있으며, 소매서점과 거래할 때는 21.6%로 상대적으로 낮다. 어음의 결제기간은 짧게는 3개월부터 길게는 6개월까지다. 반품률은 일반단행본의 경우 27.8%, 반품기간도 평균 65개월이다.

이처럼 출판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도매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출판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한울의 김종수 대표는 도매중심의 유통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도매기능은 보조적 차원에서 그치고, 대형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출판사와 서점 사이의 직거래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출판 선진국에서 출판사는 대부분의 책을 도매상이 아닌 유통센터를 통해 유통시킨다. 독일의 경우 도서시장에서 도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다. 출판사는 각 서점과 직거래하되 책의 물류나 회계는 유통센터를 이용해 해결한다. 우리의 도매상은 직거래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기능으로 조정돼야 한다.”

백의의 유훈옥 대표는 높은 반품률이 출판의 존립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옷만 해도 반품률이 20% 정도로 제한돼 있

다. 하지만 책은 무한정한 반품을 허용한다. 반품기간도 들쭉날쭉하다. 심지어는 10년 전에 출고된 책도 반품된다. 또한 출판사의 자금줄을 틀어막는 어음결제 제도도 하루빨리 현금거래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출판유통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대화된 출판유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난 1998년 문화관광부에서 발간한 《출판유통 정보화 추진방향》에서는 유통정보화를 위해 표준 서지정보를 구축하고 수발주 거래정보교환(EDI)을 이용한 정보네트워크형 출판유통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적 차원의 공동협력 필요해

출판유통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체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즉 출판도매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매업체의 대형화, 거래관행의 합리화, 취급도서의 전문화, 전산화 및 정보화 등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출판유통 개혁은 출판계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다.

탐라대 출판미디어학과 김재윤 교수는 공익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유통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제는 각자의 입장에서 벗어나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출판사와 도매상, 서점이 모여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협력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제안한다. — 박천홍 기자